

해외동향

국내기업 유럽진출 거점 마련 시급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이 확실시되는 10개국 대부분이 한국제조업 시간당 총임금비용의 50%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국가여서 서유럽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 경우 EU지역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우리업체들의 수출에는 더욱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기업도 헝가리 등에 현지 유럽진출 거점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OTRA 빈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유럽 저임금국가들과 가입 협상을 벌여왔으며 2004년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말타, 사이프러스(그리스령) 그리고 발틱 3개국 등 총 10개 국가다.

문제는 이들 국가 중 슬로베니아와 그리스령 사이프러스가 한국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

이며 나머지 8개국은 모두 저임금국가로 분류된다는 점.

오스트리아의 양대경제문제연구소 중 하나인 WIFO연구소가 발표한 국제임금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조업부문 시간당 총임금비용을 100으로 계산했을때 폴란드의 제조업부문 시간당 총임금비용이 한국의 60%수준이며 헝가리와 체코는 40% 수준, 슬로바키아는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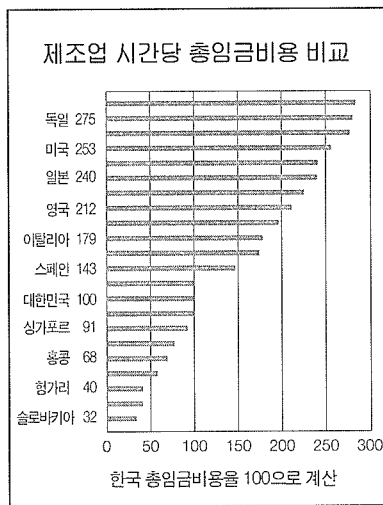
이들 비용은 영국과 프랑스의 임금의 16~30% 수준에 불과해 서유럽국가들은 저임금 생산기지를 이들 국가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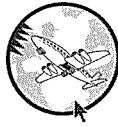
이같은 저임금국가의 EU가입은 우리나라에게는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저임금의 헝가리 등을 우리기업들의 유럽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경우 유럽 수출확대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나 서유럽 국가들이 대거 이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OTRA는 이에따라 "유럽내 생산라인을 동유럽으로 이전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갖춘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물류센터를 조성하며, 유럽개발은행 금융지원 등을 통한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임금국가 노동력이 인접선진국으로 대거 유입





해 외 동 향

되는 사태를 걱정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래 유럽연합내에서 통용되는 거주이전의 자유

를 2004년에 새로이 가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7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멕시코, 이달말 日과 FTA 체결

비센터 폭스 멕시코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중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멕시코의 경제일간 엘 에코노미스타가 보도했다.

신문은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경제장관의 말을 인용, '이번 멕시코-일본간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될 품목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메가프로젝트급'이라며 '폭스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협정에 서명하면 2004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데르베스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FTA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협정이 체결될 경우 데르베스 장관의 발표와는 달리 양국이 그동안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벌여 왔다는 뜻이 된다.

멕시코와 일본 정부는 양국간 FTA체결을 매듭짓기 위해 지난달에도 멕시코 태평양연안의 해변휴양지 아카폴

코에서 최종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그 이전에도 수차례의 협상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구결과를 검토해 왔다.

앙헬 비야로보스 로드리게스 경제부 국제통사담당 차관도 "멕시코와 일본 모두에 농수산물 부문이 민감한 사안이라는 하지만 현재 거의 모든 통상분야가 논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멕시코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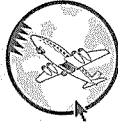
멕시코는 FTA 체결국의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아주 낮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멕시코시장 진출은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로드리게스 차관은 멕시코를 방문한 김재철 한국 무역협회장에게 "한국과의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양국 학자들간의 개별연구에 3~12개월, 공동연구엔 6~12개월이 걸려 협상개시때까지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혀 한국과의 FTA 협상착수는 요원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日, 소형모터시장 1조엔

일본 소형모터 시장이 응용분야도 최근 점점 넓어지고 있다.

모터 탑재기기의 기능, 성능을 만족시키는 사양의 소형모터가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해 외 동 향

경제산업성과 후지경제연구소 등의 통계, 조사자료를 참고로 현재의 소형 모터시장규모, 응용분야 및 종류별 사용량을 추측해보면, 버블 붕괴후의 불경기 속에서도 항상 새로운 모터 탑재기기가 등장해 수량기준으로 연 8~9%의 신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을 절정으로 2001년은 전년비 약 90%로 예상을 크게 밑돌아 모터시장으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지만 시장규모는 연간 약 40억개, 약 1조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소형 모터의 응용분야에서 기대되는 것을 예로 들면 통신, 정보처리관련 기기에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산업넷 등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수반한 프린터와 스캐너, HDD(하드디스크 구동장치), CD-ROM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판매 및 제조현장의 점검, 보수관리, 소방, 구급

구멍, 의료, 간호용 지원, 보조기기로서 사용되는 PDA 등에 탑재되는 마이크로 HDD 등에도 큰 기대가 걸려있다.

가전업계에서는 환경, 에너지절약, 고기능화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인덕션 모터, 브러시리스 DC모터와 PM(영구자석)형 동기모터로의 전환이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부터 청소기, 청정기에 이르기까지 모터제어에 의한 에너지절약, 고기능화의 확산이 예상된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의료, 간병관련 퍼스널 로봇, 인간형 로봇, 생활지원 로봇 등 학습기능을 가진 로봇개발의 진전이 예상되어 이 로봇의 기능, 동작을 구동하는 부문에 모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마이크로 머신, 극한 로봇(의료용, 방사선환경 등), 나노 관련 나노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분야에서의 수요도 주목할 만하다.

中-아세안, 11월 FTA 체결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인구 17억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시장 출범의 초석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의 골격을 마련하여 체결할 것이라고 중국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과 아세안은 오는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는 양측 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A가 실행되면 총인구 17억명에 달하는 세계최대 시장이 탄생하는 동시에 중국-아세안간 무역규모도 연간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차이나 데일리와 인터뷰

에서 “주룽지 총리가 참석하게 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한 양측의 경제협력이 아닌 FTA 출범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부장은 “중국은 우선 아세안국가들 가운데 가장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해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비가입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FTA 체결 이후 WTO 회원국들과 같은 수준의 최혜국대우를 할 것”이라며 “이밖에 역내 테러 방지 등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과 아세안간의 무역규모는 총 416억달러였



해 외 동 향

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36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에 비해 18.7%나 증가하는 등 양측의 무역량이 크게

호주, 수입화물 전자신고 의무화

앞으로 호주에 수출시 현지 도착전까지 전자방식으로 호주 세관당국에 화물보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화물보고가 지연되거나 부적절할 경우 호주 세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호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관리시스템 재개발(CMR) 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국내 관련업계의 주의와 준비가 요망된다.

호주 관세청은 화물 통관시 물류 흐름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의 EDI 시스템을 종합 화물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해 화물관리시스템 재개발(CMR: Cargo Management Re-Engineering)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호주 관세청은 지난 2000년 3월 CMR의 취지를 배포하고, 입법화를 거쳐 새로운 시스템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칙을 작성했다.

이 법령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통합된 화물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CMR은 향후 해상 및 항공화물 자동화체제를 대체하고 화물관리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호주 관세청은 설명했다.

현재는 이같은 화물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범칙금이 없으나, 11월부터는 지연 또는 부적절한 보고서 제재할 방침이라고 호주관세청은 밝혔다.

특히 CMR이 시행되면 수입화물 보고에서 △화물보고 요구사항 △보세상태 이동에 대한 적용 △화물만송보고 △상태 및 진단 △임시와 실제 도착 등의 분야가 변화할 것이라고 호주 관세청은 강조했다.

日, 전력선보호용 신형신호전송장치 개발

일본 東北電力그룹의 전기통신기기메이커인 通研電氣工業은 최근 전력선보호용 신형신호전송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15만V급 송전선의 계통보호시스템 '캐리어 릴레이시스템'을 구성하는 전력선반송장치로 송전선보호시스템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호처리에 GPS(全 地球測位시스템)의 이용에 의한 독립동기방식을 채용한 점이 최대의 특징이다.

이것에 의해 종래의 장치에 비해 소형·경량화, 고기능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同社は 작년 이 장치의 試作에 성공했다.



해외동향

그 후 실증시험에서 기본원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외란 잡음 등에 관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여 예상대로의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이번에 제품화에 나서게 됐다.

현재 최종적인 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전력업계에 대해 시장투입할 예정이다.

이 z아치는 중핵이 되는 통신방식에 관해 송·수신은 단일반송주파수를 이용, 시분할로 교차로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것으로 GPS를 이용한 점이 종래에는 없는 특색이다.

전력선반송장치에 GPS를 사용한것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GPS에서 수신된 클락신호에 의해 송전선양단 데이터신호의 步調理를 수행한다.

이러한 신기술 등의 활용에 의해 △송·수신부의 신호 처리를 위한 공통부품의 불필요 △좁은 주파수대역폭에서도 고속의 부호전송이 가능 △사양은 기존의 장치에 기준하여 있기 때문에 종합콘텐츠·필터 등의 주변 설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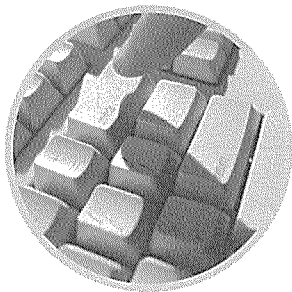
변경하지 않고 대체가 가능 △耐雷 대책으로서 다른 장치와는 광화이버로 접속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형화에 대해서는 종래의 장치에 비해 10분의 1정도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업전개에 있어서는 시스템이나 장치의 갱신 시 등에 적극적으로 구입을 권유, 전국적인 전개목표를 고려하고 있다.

전력 각 시는 15만4000V 이하의 송전선 계통보호용으로서 차단기, 사고검출기(릴레이회로와 교류기), 전력선 반송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캐리어릴레이시스템'을 도입, 운용 중이다.

그 중 송전선을 이용하여 각종 신호를 전송하는 전력반송장치는 현재 아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장치구성부품의 조달이 곤란함과 동시에 전문기술자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이상의 기능·성능향상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同社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장치의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